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2024 ~ 2028)

2023. 12.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한국 사회보장정책 현실 진단 ····· 3

1. 사회보장정책의 현 주소 / 3
2. 사회보장 정책환경 / 4

Ⅱ. 사회보장정책 발전 방향 ····· 7

1. 사회보장의 당면 과제와 극복 방향 / 7
2. 5년간 사회보장정책 비전·목표 / 9

Ⅲ. 추진과제 ····· 11

1.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11
2.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19
3. 사회보장체계 혁신 / 28

Ⅳ. 향후 추진계획 및 이행관리 ····· 34

Ⅴ. 기대효과 ····· 35

Ⅰ. 한국 사회보장정책 현실 진단

1 사회보장정책의 현 주소

□ **(제도)** 건강보험('77), 국민연금('88) 이후 상병수당까지 **모든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확대·급여 수준 향상** 추진

○ **(소득) 사회보험** 중심의 **1차 안전망**과 근로능력이 없는 아동·장애인·노인 및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 조세지원** 등을 **확충**

○ **(서비스) 생애주기별로 교육 · 고용 · 주거 ·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 지속 **확대**

□ **(행정)** 복지공무원 확충, 읍면동 복지전담팀 등 **공공 복지행정**을 개편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등 **행정기반 고도화**

□ **(지출)** '00년 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은 **'19년** GDP 대비 **12.3%**로 나타났으며, **'22년 14.8%**(예측치)까지 **상승**

<table>
<tr><th></th><th>아동</th><th>청년</th><th>중장년</th><th>노인</th><th>장애인</th></tr>
<tr><td rowspan="2">사회
서비스</td><td>영유아건강검진
유아교육·보육
방과후돌봄
드림스타트</td><td>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지원
공공주택 공급</td><td>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능력개발
노후준비서비스
고령자고용안정
지원금</td><td>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관리
재가급여
노인일자리</td><td>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언어발달
장애인건강관리
장애인일자리
정보격차해소지원</td></tr>
<tr><td colspan="5">심리·상담지원(지역사회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td></tr>
<tr><td>자산형성</td><td>디딤씨앗통장</td><td>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td><td colspan="3">자산형성지원 및 활용(주택연금, 퇴직연금 등)</td></tr>
<tr><td rowspan="2">사회보험</td><td>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td><td colspan="2">고용보험, 산재보험</td><td>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td><td>장해연금(산재)
장애연금(국민)</td></tr>
<tr><td colspan="5">건강보험</td></tr>
<tr><td>조세정책</td><td>자녀장려세제</td><td colspan="4">근로장려세제</td></tr>
<tr><td rowspan="3">공공부조</td><td colspan="5">긴급복지지원</td></tr>
<tr><td>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td><td colspan="2">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td><td>기초연금</td><td>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td></tr>
<tr><td colspan="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td></tr>
<tr><td>행정기반</td><td colspan="5">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전달체계 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행정데이터 구축</td></tr>
</table>

2 사회보장 정책환경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양 부담 및 복지수요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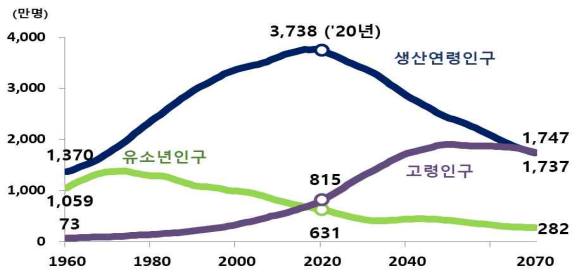
□ **(인구·가족구조)**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등 **생산인구 감소·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예상

*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 : '20년 72.1% → '70년 46.1%
65세+ 고령인구 비중 : '20년 15.7% → '70년 46.4%
** 노년부양비 변화 :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20년 21.8명 → '70년 100.6명('21,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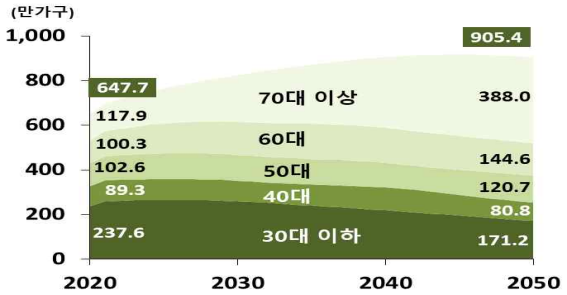
○ **가구의 소규모화,** 특히 **1인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연령도 빠르게 **고령화**** 진행 중

* 1인 가구 / 전체 가구 : '20년 31.2% → '30년 35.6%
** 노인 가구 / 1인 가구 : '20년 20.5% → '50년 51.6%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70)



1인가구 연령별 구성(2020~2050)



□ **(복지지출)**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비 지출 증가**로 2060년 복지지출은 **GDP의 27.6%**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대한 **국민의 부담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앞으로의 지출 증가**에 대한 **추가 부담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

복지지출 추계('20)

국민부담률('22)

◈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취약계층도 등장

□ **(빈곤·불평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빈곤 완화** 및 소득격차 해소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 사회적 **약자의 삶은 어렵고 노인 빈곤율도 높은** 수준*

*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 19.8%('18년) → 20.8%('21년)
노인 빈곤율(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 42.0%('18년) → 37.6%('21년)

□ **(사회적 위험)** 인구·가구구조 변화, 노동시장과 기술 변화, 규범과 문화 변화에 기인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연쇄적으로 발현**

변화 요인	⇨	변화 양상	⇨	발현 문제
인구 가구구조	⇨	▲노인인구 증가 ▲생산인구 감소 ▲가구규모 축소	⇨	▲건강 악화, **노후빈곤** 심화 ▲**노인부양비율** 증가 ▲**돌봄·양육 부담, 주거 불안정** 등
노동·기술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근로형태 다양화 ▲자동화·디지털 혁신 등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실업·고용 불안정** 증가 ▲**빈곤, 소득격차** 심화 ▲**정보 및 기술격차** 심화
규범·문화	⇨	▲가족관 변화 ▲개인의 삶의 질 중시 ▲소수자 인식 변화 등	⇨	▲**가족 기능** 약화 ▲연대/공동체 의식 약화 ▲**사회적 고립 증가** 등

○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와 결합**한 복합 위기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 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증가**

○ 일반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사회적 고립 ·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 1) 사회적 고립자(34.8%), 2) 가족돌봄자(32.0%), 3) 보호종료아동(27.1%), 4) 금융소외계층(13.4%) ('22년, 복지부, 사회보장 인식조사)

□ **(사각지대)** 분절적 전달체계, 부처·기관 간 상호 연계 부족 등에 기인한 **취약계층 발굴·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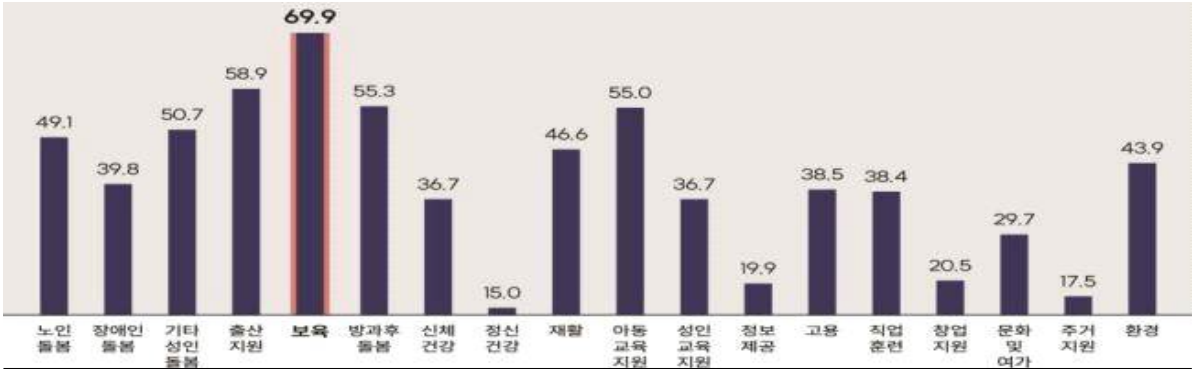
○ 또한 지원을 받아야 할 국민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복잡한 신청 절차나 다양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제도 진입장벽***으로 **작용**

* 사회보장제도 미신청 사유: 1)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53.3%), 2) 엄격한 기준으로 안될 것 같아서(17.8%), 3) 신청절차·과정이 복잡해서(14.4%) ('22년, 보사연)

◈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 기대

□ **(수요 대응 편차)**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요양 · 돌봄 · 의료 **사회서비스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영역별 서비스 충족률에 **편차** 존재

사회서비스 영역별 필요 대비 이용률



자료: '21년, 복지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 **(국민수요 변화)** 그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에 대해 **국민**도 소득 기준이 아닌 **수요에 기반**한 **보편적 서비스 이용 요구***

* 응답자의 47.9%가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을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해야한다고 응답 ('21년, 복지부, 사회서비스 수요실태 조사)

○ **사회보장의 확대 우선순위**에서도 **서비스 보장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소득 확대, 서비스 확대 중 서비스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18년 25.8% → '22년 34.8%로 1.3배 증가 ('22년, 복지부, 사회보장 인식조사)

□ **(기술 혁신) 디지털 기술 발전 · 확산**으로 고령·장애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욕구 중심 서비스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 혁신*** **기대**

* 복지혁신(welfare innovation) : 보건 · 복지 · 고용 · 환경 · 교육 등 모든 사회보장 분야, 저출산 ·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제반 활동

○ 일반 국민도 **기술 발전**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확산 기대**

* AI는 일상 속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며(86.1%),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주거 · 편의(24.6%), 교육 · 학습(19.8%))에서 혁신적 AI 제품 · 서비스 확산 기대 ('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Ⅱ. 사회보장정책 발전 방향

1 사회보장의 당면 과제와 극복 방향

◈ 파편화된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 · 강화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추구

□ 인구 위기와 저성장, 팬데믹 등 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연대와 신뢰의 저하**

○ **노동시장 이중구조** 下 산업구조 변화,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비대면화·자동화로 확산된 **불안정 고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

○ 개인 간 관계는 더욱 **단절**되면서 **고독사, 고립·은둔집단, 가족돌봄 청(소)년** 등 **소외와 배제**를 겪는 새로운 **취약계층** 등장

◈ 국가 · 시장 · 사회의 多주체 협력을 통한 서비스 중심 사회보장 실현

□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패러다임에서 **민간**이 **협력적 파트너**로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전환 요구

○ 그간 국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과정에서 민간은 **수탁자**이자 **전달체계**로서 **제도적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 표준화된 경직적 급여 제공·전달로는 **복잡·다양**해진 국민의 사회보장 **수요**에 **유연한 대응과 기민한 접근**에 한계

□ **국가**는 사회보장 **공급체계의 총괄 관리자**이자 **중개자**로서 **역할**을 **새롭게 강화**하고 국가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 필요

○ 유연성·접근성에 강점을 가진 **민간의 참여 촉진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심**의 **사회보장** 실현

◈ 중앙 · 지방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보장

□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 전사회적 변화가 **지역**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역 단위**의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고령화, 청년순이동,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 지정(89개 시군구)

□ 지역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자원·인프라** 등을 고려한 지역 사회보장체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밀착형** 문제해결 가능성 제고

○ **지역**은 사회보장제도의 보충적 역할을 넘어 주민 수요의 변화에 대한 **주도적 대응**을 위한 **지역 사회보장 기획·운영**

○ **중앙**은 **지역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 완화와 보편적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디지털 사회보장 혁신을 통한 정책 효과성 · 국민 체감도 제고

□ 빅데이터, AI 등 일상화된 **디지털 기술**을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적용·발전**시켜 지속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응** 강화

○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기술 활용·서비스 적용으로 **개인별 특성**(고령, 장애 등)을 고려한 **서비스 개선 필요**

□ **복지 서비스**를 유지·발전시키는 기술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고도화 추진 필요

○ 선제적 안내, 급여 신청·제공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회보장 현장(사례관리사, 복지공무원 등)의 **부담 완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통해
자원 투입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범부처 협력 추진

2 5년간 사회보장정책 비전 · 목표

◈ 비전 및 전략 체계도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핵심 목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전략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중점 과제	1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❶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❷ 노인 빈곤완화 지원 ❸ 장애인 소득·돌봄 보장 강화 2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❶ 취약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❷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지원 ❸ 소외된 약자 권익 보호·지원 강화 3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❶ 노동시장 지속 참여 촉진 ❷ 노후소득체계 내실화 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 지원 강화	4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❶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❷ 건강·의료보장 강화 ❸ 안전한 일상 구현 및 교육·생활서비스 제공 5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❶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❷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마련 ❸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 6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❶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 활성화 ❷ 사회서비스 지역 격차·불균형 완화 ❸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7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❶ 국민연금 제도 개혁 ❷ 고용보험의 합리적 운영 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운용체제 개혁 8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❶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❷ 제도 全주기 관리 강화 ❸ 중앙·지방 협력적 역할분담 9 기술 기반 서비스·행정체계 도입 ❶ 체감도 높은 스마트 서비스 개발·확산 ❷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인프라 구축 ❸ 사회보장 행정체계 고도화

◈ 성과지표(안)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삶의 만족도** : 6.5점 ('22) → **7.0점 ('28)**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조사,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응답(10점 척도)
1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상대빈곤율 :** 15.1% ('21) → **11.3% ('28)**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세부지표> ▲ **소득 5분위 배율**(배) : 6.0 ('21) → **5.5** ('28) ▲ **사회적 고립도**(%) : 23.8 ('21) → **18.8** ('28)
2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률** : 33.1% ('21) → **40.0% ('28)** * 복지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응답한 가구 중 실제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가구 비율 <세부지표> ▲ **인구천명당 사회서비스 종사자수**(명) : 45.6 ('21) → **55.0** ('28)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비율**(%) : 8.1 ('21) → **10.2** ('28) ▲ **건강수명**(세) : 70.9 ('22) → **73.3** ('28)
3 **사회보장체계 혁신**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복지국가 체감률 :** 53.6% ('22) → **56.1% ('28)** * 복지부, 사회보장 인식조사,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인 것에 동의하는 비율 <세부지표> ▲ **정부신뢰도**(%) : 48.4 ('22) → **51.5** ('28) ▲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률**(%) : 37.5 ('22) → **40.0** ('28)

Ⅲ. 추진과제

1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1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❶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 32%→35%), 재산기준 완화(자동차·주거)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 및 **빈곤 사각지대 완화**

○ **(의료급여)**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으로 **취약계층 의료보장 강화**

*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기준 중위소득 47%→50%)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 보장 강화**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의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으로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

*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향후 타 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현황을 고려하여 교육급여 단계적 확대 검토, 다양한 교육수요 및 학교교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저교육비 개선 검토

○ **(자활지원)** 신규 자활사업 업종 개발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 하는 등 **자활 참여 확대**를 통한 **탈수급 지원**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 **(출산·양육) 한부모가구·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 **양육비*** 지원,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출산 및 영아기 양육 부담 경감**

* '24년 기준중위소득 63%까지 확대 및 아동 1인당 월 21만원(청소년부모 월 25만원) 지급

○ **(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신규 희귀질환 지정)를 통한 의료비 지출 부담 완화

* 질환별 의료비 산정방식 → 개인별 합산방식 개편, 복합질환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교육)**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

* '24년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본계획',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식생활)**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및 **노인·임산부**에 대한 농산물 지원 **사업 연계** 추진

*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국산 농산물 구매 가능한 전자 바우처 및 식생활 교육 지원, '25년 전국단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중

○ **(에너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상 점진적 확대 및 지원단가 현실화

▪ 취약 아동·청소년 안전망 강화

○ **(학교)** 심리·정서 문제, 기초학력 부진, 경제적 곤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및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운영 등 추진

○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 및 맞춤형 지원(검정고시·진학, 자립·취업지원, 무료건강검진 등) 강화

○ **(가정 밖)** 가정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등) **퇴소 청소년** 대상 **교육·취업·주거** 등 자립지원* 강화

* (교육)국가장학금, (취업)청년도전지원사업, (경제)자립지원수당, (주거)공공임대주택 연계 등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강화,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신규 운영

*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배치,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실시 후 맞춤형 지원, 24시간 청소년상담1388 운영 등

** 지역별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발굴 및 상담 →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방문학습 및 치유 등 종합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자립지원

▪ 취약·위기가정 맞춤형 지원

○ **(취약·위기가정) 가족센터**(전국 244개소)를 중심으로 **취약·위기가정**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 가족 회복 지원 및 역량 강화

* 한부모·조손가족, 위기 청소년 가족 등에 주거·의료·심리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

○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 대상 학습지원·진로설계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전·초등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이중언어 학습 지원 등

❷ 노인 빈곤완화 지원

○ **(기초연금)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40만원)로 노인 빈곤 해소 지원

*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 등은 국민연금 개혁논의와 연계하여 검토

○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 지속 **창출**, 신노년 세대 수요에 부응한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수요 대응 방향('23) >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 ('23) 31% → **('27) 40% 이상으로 확대**

▷ **공익활동형 일자리**

- **저소득, 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의 **소득보장 기능** 및 농어촌 등 민간일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수준 유지**

* 전체에서의 비중은 낮아지나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

❸ 장애인 소득 · 돌봄 보장 강화

○ **(소득보장)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지급기준 개선 등을 통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계안정 지원*

* 장애인 소득실태 분석 등 연구('24년)를 토대로 장애인연금·수당 등 개편방안 검토

○ **(돌봄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

* '24년 주간그룹돌봄 1,500명, 주간개별돌봄 500명, 24시간개별 돌봄 340명 지원

** 대상자 확대(매년 전년대비 8천명 ↑), 고난도 활동지원에 대한 가산급여 대상 확대

2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 · 지원

❶ 취약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 **(취약 청년)** 저소득 근로청년 등 취약 청년의 **자산 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완화 등), **주거 안정****(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무상지원 등) 지원

* 기준중위100% 이하 청년, 10만원 본인저축+10만원/30만원 정부 차등지원, 3년 적립
**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연간 2천호 우선공급, 전세임대 지원 기간 확대(20세→22세)

○ **(구직포기청년) 구직을 단념**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와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 '23년 8천명 → '27년 1만명으로 지원 인원 지속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체계

구직포기청년 발굴		맞춤형 프로그램		취업 지원
▸ **지역사회·유관 기관** 등 연계를 통해 **구직포기 청년 발굴·모집**	⇨	▸ **맞춤형**(1·3·5개월) **프로그램** * 심층상담, 진로탐색, 자신감 회복 등 ▸ **참여수당·인센티브** 제공	⇨	▸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 **청년도약장려금** 등 연계 (취업 시)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23년 40→'24년 50만원/월), 사례관리 확대*, 지역별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한 지지 등 **보호체계**** 강화

* 사례관리를 통해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의료비 등 별도 지원 ('24년 2,750명)
**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 기관의 전담인력 단계적 확충 ('23년 180명 → '24년 230명)

○ **(가족돌봄청년) 학교·병원·지역사회 선제 발굴 강화** → 돌봄 부담 완화 및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

서비스 지원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재가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	+	▸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 '24년 200만원/연 신규 지원)	+	▸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커뮤니티, 가족·경험자** 등 협력체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 초기상담** 및 고립사례별 **맞춤형 통합지원 제공**

*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가칭**청년미래센터**) 신설 : '24년 시범사업(4개 시도)으로 사례관리 전담인력 배치 후 단계적 전국 확대

❷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 · 지원

○ **(고립 실태 파악)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근거기반 정책** 추진

*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규모, 위기 요인, 복지 욕구 변화 등 고독사 위험군 특성 파악

○ **(고립가구 발굴)** 생애주기·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모형** 개발, 지자체 단위로 지역밀착형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 실시

*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연 6회), 주민등록 사실조사(연 1회 이상) 등 주민 대상 각종 조사와 연계

○ **(고립해소 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 ('22년~'23년) 시범사업, 39개 시군구 → ('24년 7월부터) 전국 확대, 229개 시군구

❸ 소외된 약자 권익 보호 · 지원 강화

○ **(공공후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보호 등이 필요한 약자(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학대피해아동 등)를 위한 **공공후견제도 점진적 확대**

* 수혜자 확대, 법제 정비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 논의

○ **(지원 사각지대)** 현행 장애인정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교육·자립·고용·돌봄 등 통합적 지원방안 모색**

* 지적장애,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분별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칭

3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❶ 노동시장 지속 참여 촉진

▪ 맞춤형 고용서비스·직업훈련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및 소득지원***, 장기실업자 등 차상위계층 선제발굴**로 **사각지대 최소화**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 구직활동 의무 이행시 월 50~90만원×6개월간 지급
** 자립준비청년·위기가구·신용위기자 등을 발굴·연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유관부서 협업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범위 확대*, 상세 훈련정보 제공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접근성 제고

* 자영업자(연매출 1.5억원 미만)·특수고용근로자(월 300만원 미만), 전역 예정 단기 복무 군인, 저소득 대규모 기업 근로자 등으로 '26년까지 단계적 대상 확대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인적자원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내 직업능력 개발훈련체계 구축 밀착** 지원*

* 매년 중소기업 9천개 이상에 기초컨설팅 등 지원

○ **(청년 일경험)** 기업과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지원**('23년 2만명 → '24년 4.8만명), 청년-기업 **맞춤형 매칭** 지원

* 기업탐방형 (기업에 방문하여 청년이 직접 직무체험, 현직자와의 대화)
프로젝트형 (기업에서 제안한 현업기반 프로젝트 수행 후 결과물 평가 및 피드백)
인턴형 (기업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며 기업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
ESG지원형 (ESG 경영차원에서 수행하는 일경험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중장년 재취업)** 중장년 내일센터의 **'중장년 전담창구' 활성화**를 통해 **생애경력설계**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층상담과 중장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일자리 규모** 단계적 상향*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직무유형 개발** 확대로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

* '24년 장애인 일자리 3.2만개 → '27년 4만개 수준으로 확대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기반 조성

○ **(상병수당)** 지급기간, 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등을 다양하게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상병수당 제도화 추진**

* (~'25년) 多 모형 시범사업 → ('26년~'27년) 통합 모형 시범사업 → ('28년) 본사업 실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구분	1단계			2단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제한 無	입원
급여지급 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입원/외래)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입원/외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안양, 달서	용인, 익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23.7월부터 최대 173만명 보호)**의 현장 안착**을 적극 추진하여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

❷ 노후소득체계 내실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장기체납자**의 노후소득 증대, 가입 유도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를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추진**

* (現) 납부재개자 한정, 12개월 한도 → (改)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12개월 + α

- **출산·군복무크레딧** 지원대상·인정기간 확대 등 연계 검토

○ **(퇴직연금)**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반환 등 **활성화 지원**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확대**

○ **(주택연금)** 가입범위(공시가 9 → 12억원) 확대 및 가입 인센티브 확대(월 지급금 상향 등)를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

○ **(농지연금)**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 등 **가입 확대** 및 은퇴이양형 상품 출시, 채무상환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 지원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 **(발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제고를 위한 **위기변수 활용 고도화***, **연락처·실거주지 주소 등 정보 확대**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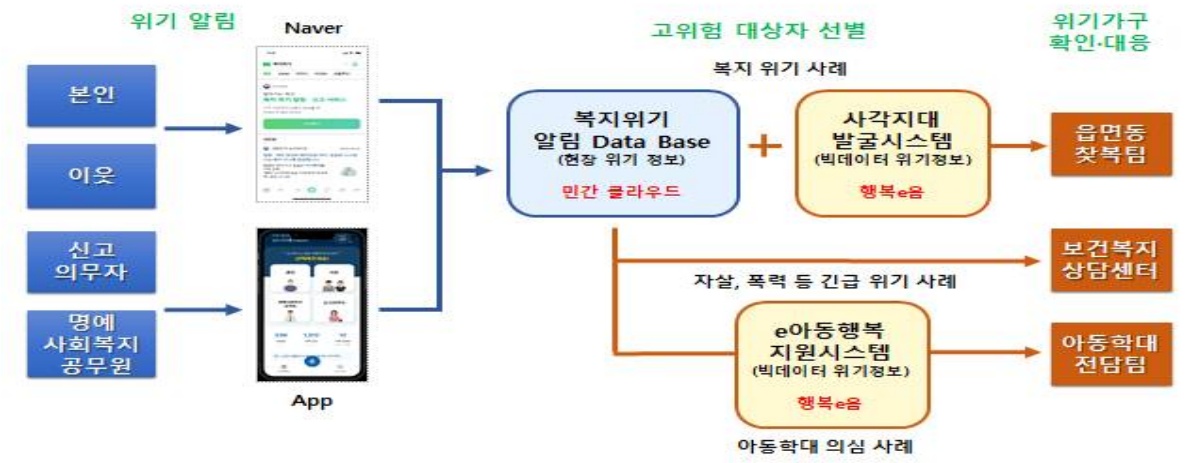
* 소득 관련 정보 입수를 통해 소득 급감·상실을 겪는 위기가구 발굴 방안 검토(중장기)

○ **(인적 안전망)** 일상 속 위기가구·사각지대의 발굴·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내 인적 안전망* 활성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집배원(복지등기) 등

○ **(위기알림 서비스)** **위기 당사자**나 이웃 등 **일반 국민이 누구든지** 쉽게 도움을 요청·신고할 수 있는 **위기알림 서비스** 체계 구축

국민참여형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체계도(안)



▸ 신속한 위기 지원 강화

○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위기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생계지원금 인상** 등 긴급복지 강화

○ **(긴급돌봄)**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차등 적용, '24년 시범사업(공모 예정) 이후 단계적 확대 추진

2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4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❶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 **(영유아)** 어린이집 **0세반** 확충* 및 **시간제 보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지속 확대 및 다자녀 추가 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충**

* 정원 미달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영아반 개설 시 인센티브 제공

○ **(아동·청소년)**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 중심의 **단계적 돌봄 체계 내실화**

* 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 확대 + 아침·저녁·틈새돌봄 등 탄력적 운영 (17개 교육청)

○ **(청장년)** 재가돌봄, 가사서비스, 병원동행 등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이용하고,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차등 적용

○ **(노인)** **의료·요양,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거주지**에서 충분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충 및 연계 강화**

- 장기요양수급자(중증) **재가급여 이용 총량** 확대 및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방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및 **수요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가사·이동지원, 도시락 배달 등)로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 수요 대응

○ **(간병)**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확대*·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입원 서비스 질 제고**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 추진**

* 간호조무사 : (現) 환자 25~40명당 1인 → (改) 환자 중증도/간호 필요도 고려 배치 상향

❷ 건강 · 의료보장 강화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 **(책임의료기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확충**으로 필수의료의 지역 균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책임-공공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조정, 성과평가 등 권한 부여

○ **(공공정책수가)** 고난도 중증의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 추진

○ **(소아응급의료체계)** 야간·휴일에 발생한 **소아 응급환자** 등의 전문적 치료 제공을 위한 **소아응급의료체계** 인프라* 확충

* (경증 소아환자) 야간·휴일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속 확충
(중증 소아응급환자) 미설치 지역 중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10→12개)

▪ 건강·의료 지원 확충

○ **(아동·청소년) 생애초기**부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등 건강체중관리 지원**

* '24년부터 임산부·만 2세 미만 영아 대상 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전국 확대
** 아동·청소년 대상 비만 예방관리 교육 실시, 고도비만 중재 프로그램 보급

○ **(장애인)** 장애인의 **만성질환·전문장애 관리**를 위한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장애인 →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보훈요양병원 확충 등*으로 **보훈의료·요양 서비스** 지원 확대

* 재활센터 1개소 완공 추진('24년) 및 6개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 **(의료취약지)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 논의

▪ 감염병 대비 상시대응 역량 강화

○ **(권역대응체계)**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별 대응체계** 마련 및 **의료대응역량 공동활용**체계 구축

* 권역 5개소는 호남('26), 경남('27), 충청('28), 경북('28), 수도권('30) 완공 예정

○ **(치료병상)**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도 대응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 병상** 확충*

* 국가지정입원치료, 긴급치료,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現) 706개 → (改) 3,547개

▪ 전국민 정신건강 지원

○ **(조기 발견) 검진대상 질환 확대, 검진주기 단축** 등 **정신건강검진 체계** 확대* 개편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정신건강 문제 **선제적 대응** 지원

* 검진대상 : 20~70세 성인 → 청년층(20~34세) 대상 우선 확대
검진주기 : 10년 → 2년으로 단축
검진항목 : 우울증 →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

○ **(심리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필요한 국민 누구에게나 전문 심리상담·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지원

* ('24년)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 → ('27년) 일반국민 포함 50만명 확대 추진

○ **(회복 지원) 역대 최초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 시행을 통해 **서비스 수요·우선순위**에 근거한 **회복 지원방안* 마련**

* 정신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휴식지원) 사업 확대 등

○ **(인프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확대**('24년 10→12개)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확대('24년 204→306명) 등 **상시대응 강화**

○ **(마약 치료·재활) 마약류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치료 지원체계****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 **(치료)** 치료보호기관 확충('23년 25개소 → '24년 30개소)
(재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17개로 확대, 24시 마약류 중독 상담센터 신규 설치

**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적용 및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 치료보호 수가 개선 등

***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 체감가능한 참여형·맞춤형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❸ 안전한 일상 구현 및 교육 · 생활서비스 제공

▪ 아동 보호체계 내실화

○ **(위기 임산부·아동)** 의료기관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모든 아동의 누락없는 출생신고 및 **공적 보호** 보장

○ **(학대위기·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집중조사** 등 위기아동 발굴 내실화 및 **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피해아동 회복지원** 강화**

* 전담의료기관 전국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25년까지)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25년까지)

○ **(보호대상 아동)** 후견 공백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후견 제도 개선, **가정형 보호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 방안** 마련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폭력 피해자)** 성폭력·스토킹 등 복합피해 사례 등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사업 추진**

*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 **(범죄 피해자)** 범행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유관부처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구성·운영,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Case Manager) 배치 추진

▪ 안전 취약대상 보호 강화

○ **(일상 안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속 확대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의 **가정 내 안전환경** 조성 및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 → 건강 어려움이 있는 노인부부, 조손가구 등 대상자 확대

○ **(재난·사고)** **안전취약대상** 재난·사고 피해 **통계** 생산관리 등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관리** 정책수립을 위해 통계 구축·제도 개선

미래 역량 중심 교육 혁신

○ **(디지털 튜터) 교육소외지역** 초등학교 등에 **디지털 튜터*** 운영으로 학생의 가정·지역 여건 등에 따른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

* 개인 디지털 역량에 따라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개별화된 디지털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수업 보조강사 ('24년 680명 → '27년 1,800명 목표)

○ **(에듀테크)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에듀테크 개발* 및 활용 활성화**

*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 에듀테크 정보플랫폼 구축 등 추진

○ **(AI 학력진단)** 미래역량 중심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검토 및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학생별 **기초학력 밀착지원***

*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인력 운영 및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

○ **(평생교육) 평생교육바우처** 제공 대상을 단계적 확대*하고 성인이 **자기역량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23년 6만명(저소득층 330만명의 약 2%) → '27년 18만명(약 5%)

교통·문화·환경 서비스 제공

○ **(교통·이동)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 **저상버스**('21년 30.6% → '26년 62% 이상 목표) · **BF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지속 확대

* 인구 10만이하 시·군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 환승 없이 인근 시·도 운행 지원

○ **(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23년 11만원 → '27년 15만원) 및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 대상 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 찾아가는(모셔오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안내 책자, 활동 보조 인력 지원 등

○ **(환경) 환경 민감·취약계층**(아동·노인 등)을 위한 **환경 개선 서비스*** **및 기후위기 취약 집단** 선별·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방안 마련

* 환경성질환 유발 유해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내환경 시설 지원, 전문 의료 상담 등

5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❶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 **(품질 평가) 기관·운영 중심 평가를 벗어나** 성과 중심 및 질적 지표 개발·도입하여 **서비스·과정 중심의 평가 실현***(24년 모의평가 적용)

* (現) 기관운영 및 계량적 평가 → (改) 이용자 만족 등 서비스 질 위주 평가

○ **(기관 지원)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미흡 기관 집중컨설팅 등 **평가 결과 환류체계** 내실화

○ **(품질인증제) 제공기관**의 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인적·물적 여건** 등을 평가하는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 인증기관(3년간 인증) 명단 공개·홍보, 시범사업('22~'24년) 성과분석 후 본사업 검토

○ **(거버넌스) 사회서비스 진흥 기관**으로서 중앙 및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공급혁신·품질관리 거버넌스 재편**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총괄**, ▸ 서비스 수가 개선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등 **연구, 정책수립 지원**	+	▸ 지자체,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품질관리 등 **지원 역할 강화**

❷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마련

○ **(규모화·다변화)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통해 영세기관의 자생력 확보, 이·동종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업 컨소시엄**** 구성 지원

* 우수 제공기관을 공모·선정, 해당 서비스 모델을 개발·표준화, 여타 제공기관에 제공

** 서비스 간 연계·협력 모델 발굴·전파를 위해 컨소시엄 10개소(제공기관 등 연합체)를 지원

○ **(투자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투자 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개발**·기술 기반 **서비스 고도화** 등 지원

○ **(인력 관리)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돌봄 분야) **제공인력 자격제도 통합·연계** 및 교육·경력관리 지원

- 돌봄서비스별로 분절적인 **제공인력의 양성 기준**을 ▲(돌봄)**공통과정**, (노인·장애인 대상별)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체계화 및 연계성 강화

  * 단기적으로 유사 교육과정은 교육시간 감면 확대 등 자격연계 강화
  (예: 요양보호사의 경우,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일부(8시간) 면제)

- 제공인력 **자격 취득 필수교육시간**을 **상향 조정**하고 임의적인 **보수교육**을 돌봄서비스 핵심분야인 요양보호사*부터 **의무화 실시**

  * '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2년동안 8시간, 온오프라인 병행)

- 서비스 제공 경력을 인정받고 교육이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노련한 제공인력**이 승급할 수 있는 **경력관리 및 보상체계*** **마련**

  *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교육 후 선임요양보호사로 배치 추진('23년 시범사업)

❸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

○ **(서비스 공급) 역량**있는 공급자의 **진입**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합리화***

  *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 제공기관은 시군구별 1개소→ 복수 지정을 허용하고,
  민간 제공기관 대상 등록제 도입을 추진

- **평가 결과 연속 저조, 운영상 문제**(보조금 유용 등) **부실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시정명령, 컨설팅 의무화, 정보공개 확대 등)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를 통해 기준 미충족 기관 퇴출 강화
  ('23년) 갱신심사 기준·절차 마련 → ('26년부터) 갱신심사 적용

○ **(서비스 수요) 중산층**도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상한**을 **완화**(폐지)하고, 질 높은 서비스 유도를 위한 **가격탄력제*** 도입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적용 후 확대 검토

○ **(거버넌스)** 사회서비스 공급자, 수요자, 감독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규제 개선** 건의·검토를 위한 **'규제 혁신 협의체'** 구성·운영

6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❶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 협력 활성화

○ **(영유아교육-돌봄)** '영유아보육' 업무(예산·정원)의 **관리체계 일원화, 교원 양성·교육과정** 등에 대한 통합모델 적용 등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고용-복지)** **복지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 정보 연계* 등 맞춤형 지원 제공

* 고용복지+센터별 사례관리 협의체 운영으로 구직자의 복합적 취업 애로요인 해소 지원

○ **(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의 건보공단 위탁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건강기록**을 **연계**하고,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관리·운영

* 복지부-교육부 공동추진 下 여가부·질병청·건보공단·시도교육청·민간전문가 참여

○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자립지원 시범사업**(장애인 4명당 지원전담인력 1명)을 통한 **주거·일자리·건강관리** 등 서비스 **통합 지원**

* ('22년) 200명 → ('23년) 400명 → ('24년) 600명 시범사업 후 본사업 추진 목표

- 장애인이 자신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해 **개인별 수요에 기초**한 **통합서비스** 이용 보장 추진

* ('24년) 8개 시군구 → ('25년) 17개 시군구 시범사업 → ('26년) 본사업 추진 목표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안)

급여 유연화 모델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활동지원 급여 일부**(약 10%)**를 **개인별 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사용** *** (공공) 발달재활, 긴급돌봄, 보조기기 등** *** (민간)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거개조 등**	**활동지원 급여** 일부**(약 20%)**를 **개인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선택**에 사용 *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등 특수자격보유한 활동지원사

❷ 사회서비스 지역 격차 · 불균형 완화

○ **(실태 파악)** 인구학적 수요를 고려한 **지역별 서비스 수급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실시

○ **(취약지 지원)** 서비스 **기관·인력** 등 공급 취약지에도 서비스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공급 취약지 지원*** 방안 검토

* 원거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비·인센티브 등 지원

○ **(특별 지원) 서비스**가 **취약**한 소규모 생활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 지역 스스로 복지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선정·지원('23년~'26년, 8개 시군구)을 통해 지역 수요·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운영 지원(전문가 컨설팅, 예산 등)

❸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 **(실태조사·개편원칙)** 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전달체계 **개편 원칙·방향** 등 논의, **이용자 중심 전달체계 개선** 방안 검토

< 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검토(안) >

전달체계 실태조사	개편원칙·범위·방향 설정	지역 시범적용·평가
▸ **서비스 대상, 내용, 이용주기, 신청방식 등 실태조사** ▸ **행정조사 및 행정데이터 분석 병행**	▸ **개편원칙**(통합성, 전문성, 접근성 및 이용형평성) **수립** ▸ **개편 우선순위 및 방향 설정** ▸ **사보위 민간위원, 전문가, 지자체(현장), 소관부서 참여**	▸ **지역 내 전달체계 연계·운영 시범적용·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달체계 배치기준, 중장기적 연계 강화 방안 등 검토**

○ **(현장 의견수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현황분석** 등 연구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편요구** 수렴, **현장맞춤형 전달체계 개선방안** 검토

- 기초 지자체의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현장 수요**를 발굴·분석하는 등 **상향식 접근**을 통해 **개편방안의 실효성** 제고

* 기초 지자체 2~3곳 선정 후 지역사회보장제도 현황분석, 중앙-광역-기초사업 전달체계 간 개편수요 발굴 등 시범분석 추진

3 사회보장체계 혁신

7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❶ 국민연금 제도 개혁

○ **(연금 개혁)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재정안정화** 등을 포괄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모수개혁 추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1. 노후소득보장 강화	2.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4. 기금운용 개선	5. 다층노후소득 보장 정립
▸수급자 실질소득 제고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율 인상**	▸기금수익률 제고	▸**기초연금 노후 소득보장기능 강화**
▸급여제도 개편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투자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국고지원 확대**	▸자산배분체계 개편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 **(사회적 합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 추진

❷ 고용보험의 합리적 운영

○ **(적용 대상·관리체계)** 국세정보 연계활용을 통한 가입누락자 발굴, **소득기반 관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고용보험 적용기준: (現)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 → (改) 소득(일정수준 이상)
보험료 부과 기준: (現) 연단위 보수총액 기준 부과 및 정산 → (改) 월 보수기준 부과

○ **(운영 방식)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구직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 간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적극 연계

❸ 건강 · 장기요양보험의 운용체제 개혁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내실화

○ **(예방 · 관리)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 · 관리 지원 강화**

○ **(지불구조)**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기관 단위보상, 네트워크 참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 검토

○ **(의료이용체계)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급여 기준·항목 재정비,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화 등 **합리적 의료 이용·공급** 유도

○ **(공사보험 연계) 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 연계 강화***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관계부처(복지부-금융위) 협업체계 강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로 비급여 데이터 수집 · 분석 및 비급여 표준화 확산 등

○ **(재정 투명성 강화)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 · 관리체계 개선**

▪ 초고령 사회 대비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재원 확보)** 요양 수요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한 **적정 보험료율 결정,** 법정 수준의 **국고지원금 지속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

* 현행 법정 국고지원율 : 해당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
('18~'23년 평균 국고지원율 19.2% 수준으로 법정 국고지원 수준 확보)

○ **(지출 관리) 대상자 적정 관리, 급여이용 관리 강화, 급여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재원누수 관리 강화**

* 부당이득금 환수 및 체납징수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8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❶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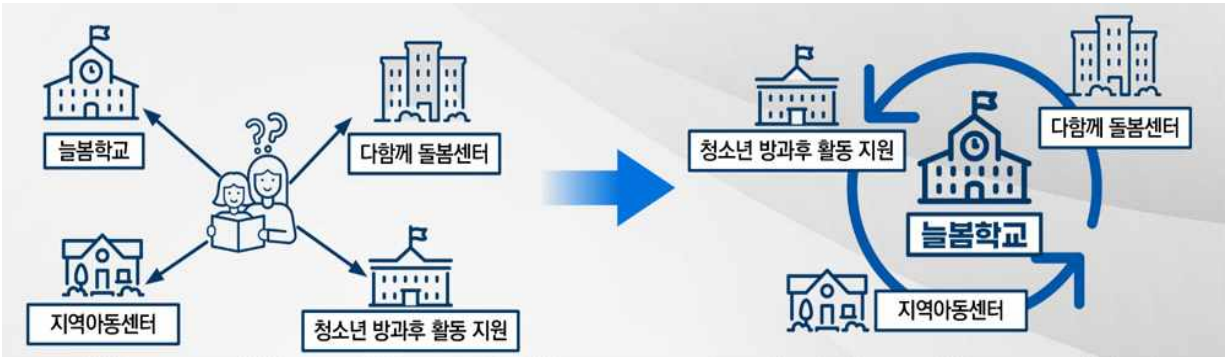
○ **(제도 정비)** 사회보장사업 간 **유사·중복성, 누락·부족 제도 발굴**을 통해 **패키지화** 및 **투자 확대** 등 **체계적 정비***

* 사업군·목적 등 분류기준에 따른 제도 간 유사·중복성 검토 및 누락·부족 제도 발굴

- 우선 추진가능한 **단기과제**부터 관리하고, 법령개정 및 전달체계 개편 등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는 **충분한 사전준비** 거쳐 추진*

* (추진 방향) 포괄범위가 큰 사업 중심으로 유관사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제도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

(예) 늘봄학교 중심 아동·청소년 교육·돌봄 연계



○ **(관리 기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현행화***(전수DB화)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기반 마련**

* 현재 '복지로'에 중앙부처 370여개, 지자체 4천여개 사업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 중으로, 전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통합 관리 모델(안)

전수조사		주요사업 모니터링		대국민 안내
▸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주기적 현행화**	⇨	▸ **주요사업 대상 목적·급여 형태·사업내용 등 모니터링**	⇨	▸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전수 내용**을 **복지로**(대국민포털)와 연계·안내

❷ 제도 全주기 관리 강화

○ **(사전협의)** 제도 간 **정합성·효과성** 및 **지자체 자율성**을 고려한 **사전협의 운영 및 협의 이행관리·모니터링 내실화**

사전협의 내실화 방향
▲중앙·지자체 사전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미협의 사업 대상기관에 이행관리 안내 및 모니터링 등 미협의 사례 최소화

○ **(사후평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생애주기별·기능별 사회보장 진단·평가,**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안) 마련

○ **(평가·환류) 정책 평가 대국민 공개** 및 제도 개선(안) **이행관리***

* (절차) 기본평가·심층평가 추진계획 수립 → 정책연구 등을 통해 분석·평가 → 제도개선안 제언 및 정책토론회 등 의견수렴 → 제도개선 통보 및 이행관리

❸ 중앙 · 지방 협력적 역할분담

○ **(거버넌스)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간 **상보적 역할분담**에 기초하여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회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 공적 재원이 **사회적 약자** 등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

-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의 **지원규모·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복지급여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예시) 중앙부처는 전국적·통일적 기준이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 **(지역계획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담당기구**(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

○ **(모니터링·환류) 시도별 사전협의 사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및 지자체 의견**을 사전협의 **운영방향에 반영**

9 기술 기반 서비스 · 행정체계 도입

❶ 체감도 높은 스마트 서비스 개발 · 확산

○ **(일상지원 R&D)** 노인·장애인의 일상 지원을 위한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복지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R&D** 지원 및 **적용 확산**

* (돌봄로봇 R&D) 이동지원, 목욕보조, 센서기반 모니터링 지원 돌봄로봇 서비스 실증('23~'27)
** (보조기기 실용화 R&D) 첨단기술 맞춤형 적용 보조기기 개발, 지역기반 보조기기 적용·확산('24~'28)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

기술/목적	기능과 예시
통신지원	실시간 시청각 번역서비스, 고령자 육체활동 모니터링, 웹기반 환자정보 제공, 원격현실을 활용한 사회적 네트워크 등
보조기술	안전경보기, 열 · 빛 · 잠긴 문에 대한 경보기, 쓰러짐·낙상 감지 기술, GPS 등 위치 기반 정보 활용 기술 등
일상생활 지원	집안일, 자동 약 지급기, 영양 · 음식 자동 장치, 쇼핑 지원 등
질병 모니터링 /원격 진료	질병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가정용 치료 및 돌봄 기술, 로봇 기술, 정신치료, 정보통신기술(가상현실, 원격현실)에 의한 심리 서비스 등
재활기술	운동 지도, 휠체어 · 보행기 등 이동 기술,
오락	여가와 즐거움, 노인을 위한 기능성 게임 콘텐츠

○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데이터 중심 **헬스케어R&D 활성화** 및 의료 마이데이터 **공유·활용 인프라***(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등) 확산

<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 세부과제 >

❶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질환·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실증

❷ **혁신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의료 AI 기반 진단보조 솔루션,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기술의 의료서비스 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실사용 근거 생산

❸ **홈스피탈 구현 기술**: 집과 의료기관 사이 연속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홈스피탈(Home+Hospital) 모델 개발·실증

*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❷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인프라 구축

○ **(서비스 모델)** ICT 기술, 돌봄로봇 등 검증된 디지털 기술을 **지역 사회서비스**(바우처)에 적용, **서비스 모델로 개발**(시범사업)

○ **(네트워크) 복지기술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 보유 기업·복지 기술 수요자 간 연계 활성화****

* 포럼, 컨퍼런스, 박람회 등 다분야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마련·운영

** (예) (공급)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등록하면, (수요)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유형의 기술과 매칭해주는 중개 플랫폼 구축 등

❸ 사회보장 행정체계 고도화

○ **(운영체계)** 국민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지원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청기반 서비스 체계 보완** 방안 검토

- **복지멤버십** 적용 사업(급여)을 중앙·지자체 복지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신청 가능한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

-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통한 복지급여 온라인 **신청 채널** 확대 및 신청절차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제고**

*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관 확대 등

- **인공지능**(AI) 기반 **초기상담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심층상담**이 필요한 **취약·위기가구**의 복지욕구를 사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 '25년(잠정) 시스템 본개통 및 AI 상담 확대 방안 등 고도화 방안 검토

○ **(행정데이터)** 범부처(복지부, 교육부, 국세청, 통계청 등)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사회정책 수립 지원**

* 33개 기관이 보유한 8백여개 데이터를 결합한 1천만명 표본 구축

- **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플랫폼**(사회보장위원회, 교육부, 통계청, 보사연 등 국책연구기관 연합)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통계·지표 생산, 정책 분석 지원

Ⅳ. 향후 추진계획 및 이행관리

범부처 협력 추진

○ **(과제) 3대** 전략 - **9대** 중점과제 - **27개** 추진과제 - **111개** 세부과제*

* 비예산 과제 44개, 예산수반 과제 67개

○ **(부처)** 복지부·고용부·교육부·여가부 등 **총 15개 부처** 참여

* 2개 이상 부처가 연계된 대표협력과제 11개

○ **(재원)** '24년 추진과제 기준 **약 69조원**으로 추계*

* 67개 예산수반 과제의 국비, 지방비, 기금 등 포함(연금·건보재정 등은 미반영)

⇨ **약자복지 등 핵심투자** 분야에 효과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및 모니터링을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추진**

지역사회보장 연계

○ 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수립**을 통해 중앙·지역 간 사회보장제도 운영 **정합성 강화** 및 **내실화** 도모

-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비전·전략**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교육 등 실시

이행 관리 및 모니터링

○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와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병행하여 **정책 환류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급성·적시성 높은 과제, 다부처 협력과제** 등을 **중점 핵심 과제**로 부각하여 수립, **집중 이행관리 실시**

○ 연도별 **사회보장제도 평가결과** 및 제3차 **기본계획 중간평가 결과** (성과지표 모니터링 분석·평가)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Ⅴ. 기대효과

아동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보호출산제, 유보통합, 늘봄학교

청소년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학교밖·가정밖 청소년보호, 학생맞춤통합지원

청년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족돌봄 ·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장년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 관리,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노인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요양-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기초연금

장애인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누립니다

개인예산제, 최중증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

소득	▪ 두텁고 촘촘한 소득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 지원 ▪ 국민연금 개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국민 노후 지원
보건의료	▪ 건강보험 개혁, 필수의료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장
건강	▪ 생애주기별 건강투자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돌봄	▪ 질 좋은 돌봄서비스로 삶의 질 증진
고용	▪ 고용안전망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 증진
교육	▪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인재양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주거	▪ 주거부담 완화, 취약주거지원을 통한 인간다운 주거생활 보장
문화	▪ 문화누림의 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증진
환경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국민 건강 보호
안전	▪ 폭력·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으로 안전한 일상 보장
보훈	▪ 유공자·보훈가족의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

참고 1 분야별·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구분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소득	생계급여 인상 한부모·청소년부모 양육비 긴급복지 강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상병수당 제도화	장애인연금 인상	부모급여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자기돌봄비 지원 청년내일저축 계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인상
돌봄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돌봄 공공후견제 활성화	출생통보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유보통합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확대
보건의료·건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지원	건강주치의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필수의료 강화 마음건강 투자지원 비대면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활사업 참여 확대	장애인일자리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경험 지원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장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중장년내일센터 재취업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교육	교육급여 인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늘봄학교 디지털튜터 지원 청소년 통합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대출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주거	주거급여 인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지원 (저소득청년)		
문화교통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교통·이동약자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교통·이동약자 지원

〈 추진기반 고도화 〉

❶ 사회서비스 기반 : 품질평가 강화, 제공기관 투자 지원, 제공인력 전문성 관리 강화, 규제 합리화 등

❷ 사회보장 행정 기반 : 빅데이터 위기가구 발굴, 복지멤버십 안내, 서비스 통합신청창구,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참고 2 제2차('19~'23)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 및 성과분석

□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①**고용·교육**, ②**소득보장**, ③**건강보장**, ④**사회서비스 보장**의 **4개 분야**별 과제* 제시

* 4개 분야 12대 핵심추진과제 92개 중점추진과제 제시

□ 제2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제3차 기본계획 보완 방향

○ **(전략)**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가 드러나지 않는 한계

> ⇨ (3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 제도를 촘촘하게 연계·구성 (전략1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 (3차) 유사 기능·목적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조정** 등 관리기제 마련 (중점8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평가)** 각 제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상세 점검** 필요

> ⇨ (3차) **행정데이터·통계** 기반 **제도 성과** 분석 및 기본계획 **이행관리** 추진 (중점8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중점9 '기술기반 서비스·행정체계 도입')

○ **(지표)** 성별임금격차, 건강수명 등 **결과지표**를 제시한 것은 고무적이나, **과제와의 연결성**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실제 달성이 어려운 지표가 포함

> ⇨ (3차) 총괄-전략 지표를 결과 중심 지표로 구성하되, **중점과제와 연관된 산출지표** 등을 **함께 제시**하여 기본계획 **이행관리** 추진

○ **(균형)** 사회보장제도 확충·내실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미흡

> ⇨ (3차) **사각지대 해소, 공급 기반 확충** 등 제도 내실화와 (전략1·2)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제도 통합관리**로 제도 효과성·건전성 제고 (전략3)

□ 분석 결과

○ **성과지표** 대부분 **개선**되는 추세(일부 달성) 및 **과제 정상추진**(90% 이상)

- [1]대표지표와 세부지표, 과제 간 연계성, [2]외부요인(코로나19 등)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표 변화에 대한 추가 분석 필요

제2차 계획 지표 달성 수준 분석('23.11 기준)

※ 성과지표 달성/미달성

분야	지표명	출처	'19년	목표('23년)	현황
총괄	삶의 만족도	OECD (BLI)	28위 ('17)	20위	(OECD 최신 수치 미공표)
고용 교육	**저임금 근로자 비중 감소**대표	고용부	22.3% ('17)	18.0%	16.9% ('22)
	평생학습참여율	교육부	35.8% ('17)	40.4%	28.5% ('22)
	고용보험피보험자	고용부	1,343만 명('18)	1,500만명	1,490만명 ('22)
	연간 노동시간	고용부	2,014시간 ('17)	1,800시간대	1,928시간 ('22)
소득 보장	**상대빈곤율 완화**대표	통계청	17.4% ('17)	15.5%	15.1% ('21)
	비수급빈곤층	복지부	89만명 ('18)	47만명	66만명 ('23)
	노후소득보장 대체율	복지부	48.3% ('17)	52.0%	39.0% ('19)
건강 보장	**건강수명 연장**대표	WHO	73세 ('16)	75세	73.1세 ('19)
	건강보험보장률	복지부	62.6% ('16)	70.0%	64.5% ('21)
	예방가능사망률	복지부	30.5% ('15)	25.0%	15.7% ('19)
	흡연률	복지부	18.5% ('16)	14.0%	19.3% ('21)
사회 서비스	**GDP 대비 투자비율 확대**대표	OECD (SOCX)	5.7% ('15년)	7.4%	7.3% ('20)
	장기요양수급률	복지부	8.0% ('17)	10.0%	10.7% ('21)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	복지부	25.0% ('18)	40.0%	34.7% ('21)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국토부	6.3% ('16)	9.0%	8.0% ('20)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고용부	6.8% ('17)	10.5%	9.5% ('21)

◈ 성과와 한계

- (성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공공부조 확대, 노인 재가돌봄서비스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권역외상센터 등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개선
- (한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노후소득 불안정, 돌봄 부족** 등 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

참고 3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과제 목록 (111개)

[전략 1]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44개)

과제명	소관부처
1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❶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1-1.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1-2.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1-3.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국토교통부
1-4. 교육급여 보장성 강화	교육부
1-5. 자활을 통한 탈수급·자립 지원	보건복지부
▪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1-6. 출산·양육 부담 경감	여가부, 복지부
1-7.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질병청
1-8. 취약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교육부
1-9.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10.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취약 아동·청소년 안전망 강화	
1-1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교육부
1-12.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여성가족부
1-13. 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1-14.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강화(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은둔고립)	여성가족부
▪ 취약·위기가정 맞춤형 지원	
1-15. 가족센터 맞춤형 통합지원	여성가족부
1-16.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지원	여성가족부
❷ 노인 빈곤완화 지원	
1-17. 기초연금 확대	보건복지부
1-18. 노인 일자리 확대	보건복지부
❸ 장애인 소득·돌봄 보장 강화	
1-19 장애인 소득보장(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1-20.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돌봄,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과제명	소관부처
2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 · 지원	
❶ 취약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2-1. 취약청년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거 지원)	복지부, 국토부
2-2. 구직포기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3.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2-4. 가족돌봄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2-5. 고립·은둔청년 지원	보건복지부
❷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 · 지원	
2-6. 고립 가구 실태 파악 및 지원	보건복지부
❸ 소외된 약자 권익 보호·지원 강화	
2-7. 공공후견제도 확대(치매노인, 발달장애, 정신장애, 학대피해아동)	보건복지부
2-8. 지원 사각지대 통합적 지원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3 변화하는 사회적위험 대응 강화	
❶ 노동시장 지속 참여 촉진	
⁝ 맞춤형 고용서비스·직업훈련 강화	
3-1.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복귀 촉진(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3-2.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접근성 제공(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3-3. 중소기업재직자 훈련 지원(능력개발전담주치의)	고용노동부
3-4. 청년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3-5. 중장년 재취업 · 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3-6. 장애인 일할 기회 확대(장애인 일자리)	보건복지부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기반 조성	
3-7. 상병수당 제도화	보건복지부
3-8. 산재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고용노동부
❷ 노후소득체계 내실화	
3-9. 국민연금 가입저변 확대(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보건복지부
3-10.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	고용노동부
3-11. 주택연금 활성화	금융위원회
3-12. 농지연금 보장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과제명	소관부처
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 지원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강화	
3-13.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보건복지부
3-14. 위기알림 서비스 구축	보건복지부
▪ 신속한 위기 지원 강화	
3-15. 긴급복지 강화	보건복지부
3-16.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전략 2]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45개)

과제명	소관부처
4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❶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4-1.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충(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복지부, 여가부
4-2. 아동청소년 통합적 돌봄 제공(늘봄학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교육부, 여가부
4-3. 청장년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일상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4-4. 노인 지역사회 거주 지원(의료·요양·돌봄, 장기요양, 노인맞돌)	보건복지부
4-5. 간병 지원체계 내실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지원)	보건복지부
❷ 건강·의료보장 강화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4-6. 책임의료기관 확충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보건복지부
4-7. 공공정책수가 도입	보건복지부
4-8. 소아응급의료체계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 건강·의료지원 확충	
4-9. 아동·청소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생애초기 건강관리, 비만예방)	복지부, 질병청
4-10. 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건강주치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보건복지부
4-11. 보훈 의료·요양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부
4-12. 의료취약지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복지부
▪ 감염병 대비 상시대응 역량 강화	
4-13.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감염병전문병원, 상시병상 확충)	질병청

과제명	소관부처
⁘ 전국민 정신건강 지원	
4-14. 정신건강 문제 선제적 대응(정신건강검진체계)	보건복지부
4-15. 마음건강 서비스 확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4-16. 정신응급인프라 확충(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보건복지부
4-17.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 지원	식약처, 복지부
❸ 안전한 일상 구현 및 교육·생활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4-18. 보호출산제 도입·운영	보건복지부
4-19. 위기아동 발굴·보호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보건복지부
4-20. 보호대상 아동 지원(가정형 보호)	보건복지부
⁘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4-21.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여가부
4-22. 원스톱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법무부
⁘ 안전취약대상 보호 강화	
4-23. 가정내 안전환경 조성(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4-24.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통계 구축・제도개선	행정안전부
⁘ 미래 역량 중심 교육 혁신	
4-25. 교육격차 해소(디지털 튜터)	교육부
4-26. 디지털 활용 교육 혁신(에듀테크)	교육부
4-27. AI기반 기초학력 지원	교육부
4-28. 평생학습 확대(평생교육바우처)	교육부
⁘ 교통·문화·환경 서비스 제공	
4-29. 교통약자의 교통·이동권 보장(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BF 인증)	국토부, 복지부
4-30.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4-31. 환경 민감·취약계층 지원 등(대기오염물질 정보서비스, 환경보건서비스 등)	환경부
5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❶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5-1. 품질 평가·관리 내실화(품질평가 개선, 품질인증제,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과제명	소관부처
❷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마련	
5-2. 제공기관 규모화·다변화 지원	보건복지부
5-3.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 투자 지원	보건복지부
5-4. 제공인력 자격제도 통합·연계 및 역량강화	보건복지부
❸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	
5-5. 서비스 수요·공급 규제 개선(규제혁신 거버넌스 운영 등)	보건복지부
6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❶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 활성화	
6-1. 교육-돌봄간 통합 협력 기반 구축(유보통합)	교육부, 복지부
6-2. 고용-복지간 통합 협력 기반 구축(고용복지+센터 활용)	고용부, 복지부
6-3. 건강검진체계 통합	교육부, 복지부
6-4. 장애인 당사자 중심 통합서비스 지원(자립지원, 개인예산제)	보건복지부
❷ 사회서비스 지역 격차·불균형 완화	
6-5.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급 격차 실태 파악	보건복지부
6-6. 서비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취약지 지원 인센티브)	보건복지부
6-7.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선정·지원	보건복지부
❸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6-8. 사회보장 전달체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6-9. 현장맞춤형 전달체계 개선	보건복지부

[전략 3] 사회보장체계 혁신 (22개)

과제명	소관부처
7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❶ 국민연금 제도 개혁	
7-1. 연금 제도 개선(사회적 공론화 등)	보건복지부
❷ 고용보험의 합리적 운영	
7-2.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	고용노동부
7-3.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 강화	고용노동부

과제명	소관부처
❸ 건강·장기요양보험 운용체제 개혁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내실화	
7-4. 지불제도 다변화 검토	보건복지부
7-5. 의료이용체계 개선	보건복지부
7-6.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강화	복지부, 금융위
⁝ 초고령 사회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7-7.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보건복지부
8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❶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8-1. 사회보장제도 체계적 정비	보건복지부
8-2. 통합관리 기반 마련(전수조사 현행화·모니터링 및 대국민안내)	보건복지부
❷ 제도 全주기 관리 강화	
8-3. 사전협의 및 이행관리 내실화	보건복지부
8-4. 제도 운영의 성과평가 및 환류	보건복지부
❸ 중앙·지방 협력적 역할분담	
8-5.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구축·운영(모니터링 및 환류)	보건복지부
8-6.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9 기술 기반 서비스·행정체계 도입	
❶ 체감도 높은 스마트 서비스 개발 · 확산	
9-1. 복지기술을 활용한 일상생활 지원 R&D(돌봄로봇, 보조기기 R&D 등)	보건복지부
9-2.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및 확산(R&D, 의료마이데이터 등)	보건복지부
❷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인프라 구축	
9-3. 복지기술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9-4.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❸ 사회보장 행정체계 고도화	
9-5. 복지사업 선제적 안내(복지멤버십)	보건복지부
9-6.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보건복지부
9-7. 신청 기반 서비스 체계 보완	교육부
9-8. AI 기반 심층상담 지원(AI 초기상담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9-9. 행정데이터 연계 · 활용 및 통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